

중국, 일본 화학제품 통관 엄격화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 검사비율 10%에서 100%로 올려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세관당국이 일본제품에 대한 통관을 엄격화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텐진(Tianjin) 세관당국은 일본기업들에 대해 전자제품 등의 원재료 수입 관련 검사비율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하이(Shanghai) 세관당국은 일본이 수출하는 화학제품 원료의 검사비율을 통상 10% 정도에서 100%로 올려 전량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칭다오(Qingdao)에서도 세관당국이 일본산 부품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시작해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9월11일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일본제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 강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며, 일본 산업계는 중국 세관당국의 엄격한 통관조치를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일본계 제약기업들은 중국기업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센카쿠 사태>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일본 상품에 대한 통관 강화로 보복했었다.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의도적 통관 지연은 일본기업 입장에서 제품의 납품 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1>